

# 심화되는 가계 기업간 소득 양극화: 현상, 원인, 함의 및 대응방안

*Increasing Polarization between Families and between Firms: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계와 기업소득간 성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에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은 20%p에 가까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양부문간의 성장 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장기평균치의 3배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통계작성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이같은 가계 기업간 성장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반발하고 있는 현상으로, 외환위기 이전 20여년간 양부문의 장기성장률이 거의 같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07년 이후의 가계 기업간 양극화는 임금과 고용 부진에 따른 피용자 보수와 기업 이윤(영업잉여)간의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증가율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잉여 증가율은 오히려 이전 기간보다 높아지면서 고도성장기 수준에 근접하는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동기간 영업잉여 증가율의 1/4 수준에도 못미치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인당 실질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2007~10년간은 마이너스 증가의 심각한 침체를 보였다. 한편 2000년대 초의 양극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소득 요인은 최근의 양극화에서는 기여율이 미미하였고, 2차분배(조세 및 준조세) 요인, 자영소득 침체 등이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가계 기업간 양극화는 가계소득 부진을 통해 내수 부진과 가계저축율 하락,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최근 우리경제 주요 현안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용과 임금의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 노력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생산성 수준의 임금상승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세 및 준조세 측면에서도 가계소득 창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 서: 문제는 가계 기업간 양극화이다

2010년에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5.5%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가계소득(실질)

은 그 절반에 못미치는 2.5% 증가에 그쳤다.<sup>1)</sup> 반면 기업소득(실질)은 무려 26.8%나 증가하였다. 즉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차이는 24%p가 넘는다. 이같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증가율 격차는 2010년 한해에 국한되지

1) 본고의 논의에 사용된 통계는 대부분 한은 ECOS 시스템의 제도부문별 국민소득 통계를 기초로 한 것임. 가계 및 기업소득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가처분소득을 의미함. 제도부문별 국민소득 통계는 명목통계만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도 일부 횡단면적 비교의 경우에는 명목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음. 다만 기간별 성장 추이를 아울러 살펴보는 경우에는 GNI 디플레이터로 실질화(2005년 기준)하여 분석하였음.

않는다. 2007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은 일관하여 가계소득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그 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기업소득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간의 큰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소득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양부문의 소득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추이를 보인다.

거시경제학의 첫부분에서 배우듯이, 가계와 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양대 부문으로, 기업은 상품 생산(공급)자이자 생산요소의 수요자이고 가계는 상품수요자이자 생산요소 공급자로서 양부문간에 소득 순환의 흐름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양부문의 소득은 비슷한 성장추이를 보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경제는 양부문이 장기적으로 거의 동일한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경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간 소득 성장률 격차는 최근 수년간 더욱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라 부를만 하다. 양부문간의 소득 성장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가지 예는, 뒤에서 보이겠지만 기업소득 증가율이 2000년대 들어 고도성장기(1975~9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점이다. 전체경제의 소득 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고도성장기에 비해 절반 정도로 하락하였는데 기업소득 증가율은 두 배 높아졌다면, 당연히 가계소득 증가율은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00년 이후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에 비해 거의 1/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즉 최근의 높은 기업소득 성장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가계소득 부진을 동반하고 있다.

기업소득이 높은 증가를 보이면서 전체경제의 성장도 동반하여 높은 추이를 보인다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기업소득 증가율은 반대로 더 높아지고 있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가계소득의 부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들어 우리경제에 주요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상당수는 가계소득 부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나 내수의 상대적 부진, 체감회복세 부진, 가계저축률 급락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의 가계 기업간 소득 성장 양극화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제들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성에 비해 가계 기업간 양극화 문제는 일반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무엇보다 최근의 가계 기업간 양극화의 내용과 원인, 파급영향 등을 살펴보면서 동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은 작년 8월 본지에 게재하였던 선행연구 '다시 확대되는 가계 기업간 소득 양극화'의 후속편에 해당되는 글이다. 선행연구에서는 2009년까지의 추

이를 살펴보았는데, 이후 2010년 들어 불행히도 선행연구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양부문간의 성장 격차는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동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논의에 별로 진전이 없다는 점이 이번 후속논의의 배경의 하나이다.

이번 후속논의는 상기 선행연구에서 몇가지 좀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2010년까지의 최근 자료로 분석을 업데이트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0년 들어 가계 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뒤에서 보이겠지만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은 2010년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수준을 경신하였다. 아울러 국내 가계 기업간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계 기업 소득추이에 대한 간략한 국제비교를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양극화의 원인 논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서술적 분석에 그친데 반해, 본고에서는 요인별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양극화에 대한 소득 구성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가계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내수부진이나 가계부채 문제 등과 같은 최근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하여 갖는 함의 내지 관련성에 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먼저 2010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양부문간 양극화의 현상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3절에서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주요 소득 구성요인별 변화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4절에서는 동

문제가 최근의 경제 현안과 관련하여 갖는 함의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정책 대응방안에 대한 간략한 논의와 더불어 글을 끝맺는다.

## 2. 가계 기업간 성장 양극화 추이

앞서 설명한대로 가계 기업간 소득 성장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림 1]에서 보듯 제도부문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에서 외환위기 이전(1997년)까지의 양부문 실질소득의 평균증가율은 각각 8.2%, 8.1%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2000~10년)에는 기업소득 16.5%, 가계소득 2.3%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그 격차는 최근 들어 더 확대되어 2007년 이후에는 기업소득 19.1%, 가계소득 1.6%로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양부문간 소득성장의 양극화 현상은 전체경제의 성장률과 비교한 기간별 성장률 변화 추이를 통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1]에서 보듯 GNI를 기준으로 한 전체경제의 소득성장률은 경제사회의 성숙화 추이를 반영하여, 고도성장기에 해당하는 외환위기 이전 기간(1975~97년간) 평균 8.9%에서 2000~10년간은 3.4%, 2007년 이후는 2.8%로 계속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sup>2)</sup>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소득 성장률은 1975~97년간 8.2%에서 2000년대

2) 최근 들어 가계 기업간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2007년 이후임. 그런데 2007년의 성장률은 2006년의 소득 자료를 베이스로 하여 얻어짐. 따라서 본문에서는 2007년 이후라 표현하지만,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 등을 통해 2007년 이후의 양극화를 보이는 표나 그림에서는 예컨대 2006~10년간과 같이 표기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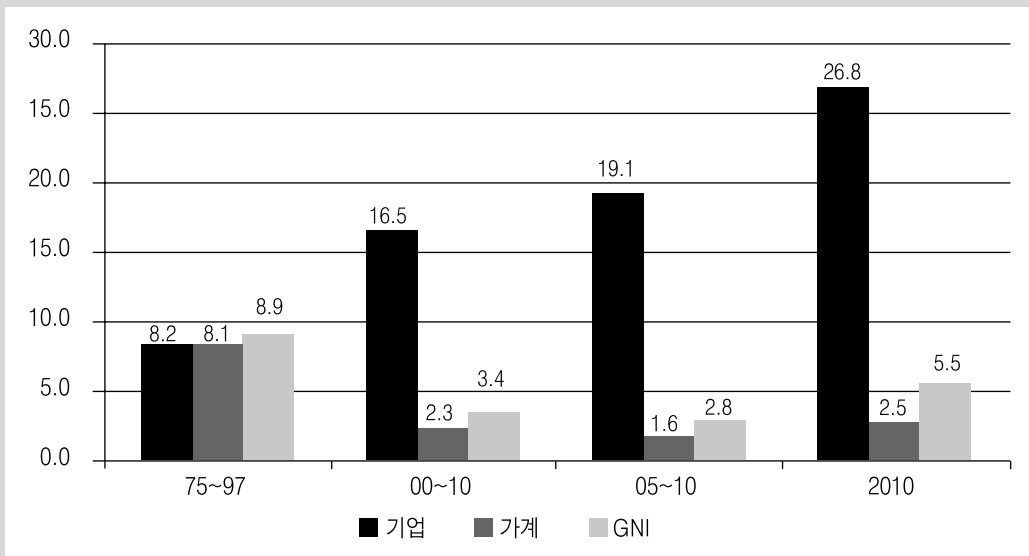
16.5%, 2007년 이후 19.1%로 최근으로 올수록 고도성장기보다 2배 이상 더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전체경제 성장률의 하락 추이보다 더 빨리 하락하여 최근(2006~10년간)의 증가율(1.6%)은 고도성장기(8.1%)의 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기업소득 성장률은 가속되고 있는 반면, 가계소득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차이를 반영하여 기업소득/가계소득의 비율 추이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위기 이전에는 동비율이 거의 일정한 수준에 머물렀던 반면, 위기 이후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고,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동비율이 대체로 0.05~0.1 구간 내에서 변동하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동비율이 0.1을 상회하여 계속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0.2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10년의 동비율은 0.22로서 통계작성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전 동비율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이같은 최근 한국의 기업/가계소득간 격차 확대 추이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3, 4]는 각각 미국과 일본경제에서 동비율의 장기추이로서, 양국 공히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이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일정하다. 미국의 동비율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외환위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0.06~0.12 구간에서 변동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림 1. 우리나라 가계소득, 기업소득,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변화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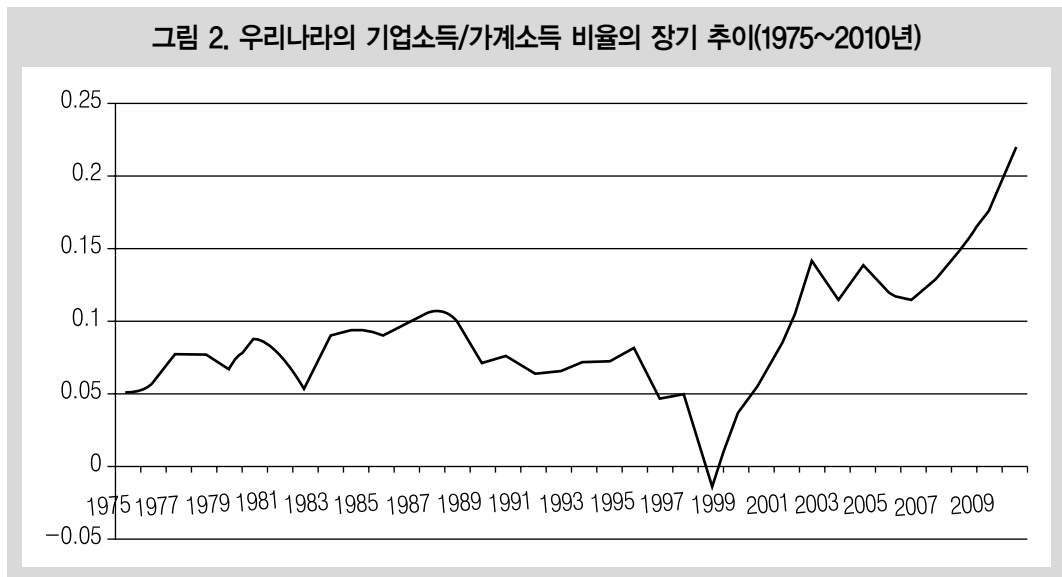
주: 1) 가계소득은 개인 가처분소득, 기업소득은 법인 가처분소득  
 2)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명목자료를 GNI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구한 연평균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ECOS

일본 역시 비슷한 0.05~0.12 구간에서 변동하고 있다. 동비율이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기는 하나 그 상승세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비교하면 훨씬 완만하다.<sup>3)</sup>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한국의 기업소득/가계소득은 최근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의 양부문간 소득 성장률 격차 확대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듯 두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외환위기 직후인 2000~02년간과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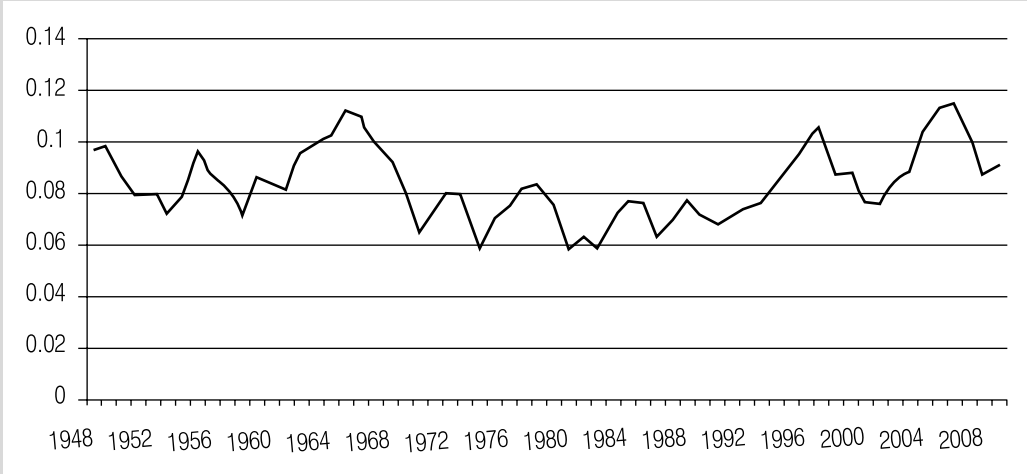
이후 최근까지 격차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양부문간 양극화는 몇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첫째 양부문간 성장격차가 매우 큰데다 2007년 이후 최근까지 4년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 등 통상적으로 추세를 보이지 않는 관련 지표들이 상승추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극심한 경기침체기였던 2009년에도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양부문간 성장 격차가 이전 년도보다 더 확대되는 추이를 보였다는 점

그림 2. 우리나라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1975~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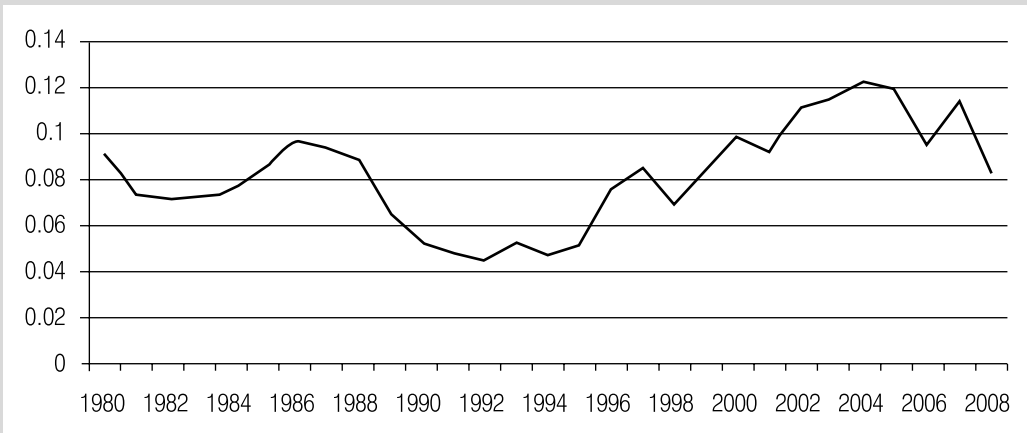
3) 다만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이윤만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계 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예컨대 NY Times 2010.11.23 기사 "Corporate profit were the highest on record last quarter" 참조). 상기 보도에 따르면 2010년 3분기 미국 기업의 세전 이윤은 연간 환산시 1,66조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 경우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림 3)의 비율이 최대 1.2에 근접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동비율의 상승속도나 지속 기간 등에서 최근 한국의 추이에는 훨씬 못미침.

그림 3. 미국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 장기 추이(1948~2009년)



주: 가계소득은 개인가처분소득, 기업소득은 세후이익(corporate profit after tax)  
 자료: BEA

그림 4. 일본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 장기 추이(1980~2008년)



주: 기업소득은 민간법인 가치분소득, 가계소득은 개인가처분 소득  
 자료: 내각부

등을 들 수 있다.<sup>4)</sup>

요컨대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계 기업간 양극화는 그 격차의 규모나 변화 추이 등에서 이례적이라 할 만하며, 그만큼 중대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 현상이라 보여진다. 다음 절에서는 가계와 기업소득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서 양극화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한다.

### 3. 양극화의 원인

가계와 기업소득 성장 격차의 원인은 양부문 소득의 구성항목들의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제도부문별 생산(부가가치)과 소득 통계에 제시되어 있다. 가계와 기업이 산출하는 부가가치는 제도부문별 생산통계를 통해 현재 2000~09년 간의 자료가 공표되어 있다. 한편 생산된 부가가치가 다시 요소소득별로 분배되는 구조는 제도부문별 소득통계를 통해 볼 수 있다. 제도부문별 소득통계는 1975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가계의 소득은 임금(피용자 보수)과 재산소득으로 구성되며, 재산소득은 다시 이자소득과 임대료,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다. 임금과 재산소득의 합이 가계의 세전소득에 해당하는 가계 본원소득(NNI)이다. 가계 본원소득에서 다시 개인소득세 등 조세와 준조세(순사회부담금, 이전지출 등)를 차감하면 가

계 가처분소득(NDI)이 된다.

한편 기업소득은 이윤(기업 영업잉여)가 주항목이다. 기업이 자금 등의 순수요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 재산소득이 負(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영업잉여에서 순이자지불, 순인료 지불, 순배당 지불 등을 차감하면 기업의 본원소득이 된다. 본원소득에서 법인세 등 조세와 준조세를 차감하면 기업의 가처분소득이다.

이제 이들 소득구성항목들의 변화를 통해 2000년대 초나 2007년 이후 가계 기업간 성장 격차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1) 임금/이윤간 분배구조 변화: 영업잉여 호조와 피용자 보수 부진

임금소득(피용자 보수)과 기업 이윤(기업 영업잉여)은 각각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을 구성하는 가장 주된 항목이다. 그런 만큼 임금과 이윤간의 배분구조 변화는 가계와 기업소득의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간별로 양자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피용자 보수 증가율과 기업이윤(영업잉여) 증가율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피용자 보수 증가율이 영업잉여 증가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양자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영업잉여 증가율이 피용자 보수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4) 일반적으로 기업소득은 가계소득보다 경기순환과정에서 변동성이 높아 경기침체기에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기업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추이를 보임.

기업 영업잉여 증가율이 피용자 보수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다(표 1 참조).

더욱이 <표 1>에 나타난 피용자보수 증가율과 영업잉여 증가율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제 이윤/임금간 분배구조 격차를 과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2000년 이후 자영업 및 무급종사자의 상당수가 임금노동자로 전환되면서 피용자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피용자수 증가율은 2000~10년간 2.4%, 2006~10년간은 2.2%로 같은 기간중의 전체 취업자수 증가율 1.2%, 0.7%에 비해 훨씬 높다. 이같은 피용자수 증가를 반영하여 피용자보수 총액을 피용자수로 나눈 1인당 실질 피용자 보수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1.3%, 2006~10년간에는 -0.2%로 부진이 두드러진다. 둘째 <표 1>의 피용자보수에는 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분 이외에 가계부문(자영업)이나 정부부문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 영업잉여와 대응되는 기업부문만의 피용자보수는 표의 수치보다 증가율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기업 부문에서 발생한 피용자보수는 따로 통계가 발표되

지 않지만 기업 부문의 순부가가치 생산에서 기업 영업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략적으로 추정해보면 전체 피용자 보수 증가율보다도 상당정도 낮은 수치가 얻어진다.

요컨대 2000년 이후, 특히 2007년 이후의 영업잉여 및 피용보수 추이는 한마디로 영업잉여 호조, 피용보수 부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06~10년간의 기업 영업잉여 증가율은 9.2%로 고도성장기 수준(10.2%)에 근접한다. 반면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2.1%, 특히 1인당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0.2%로 절대액이 감소하는 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기업 이윤과 피용자 보수 증가율간 격차 확대 추이는 주요 관련지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들어 기업 영업잉여/피용자 보수 비율은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0년의 동비율은 0.47로 통계작성 이후(197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노동분배율(자영소득 제외 분배율)은 가파른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10년의 노동분배율은 역시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sup>5)</sup>

표 1. 기업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기간별 증가율(실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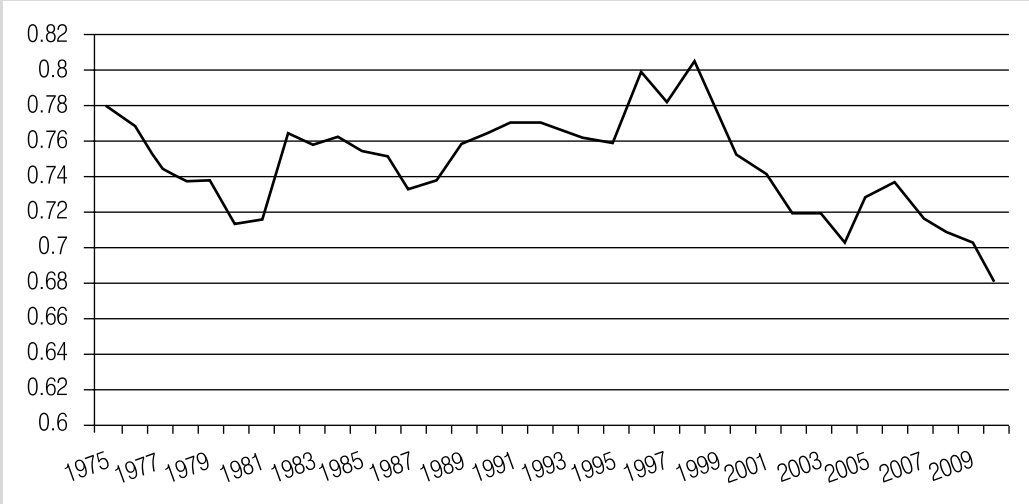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1975~97년	2000~10년	2000~02년	2006~10년
기업 영업잉여	10.2	6.9	12.2	9.2
피용자 보수	10.7	3.8	5.6	2.1
피용자수	4.8	2.4	3.0	2.2
1인당 피용자 보수	5.6	1.3	2.5	-0.2

5) (그림 5)의 노동분배율은 자영소득을 제외한 노동분배율 추이임. 노동분배율 지표로 종종 사용되는 피용보수/요소소득 비율은 개



그림 5. 자영소득 제외 노동분배율 장기추이



주: 피용자 보수/(요소비용 국민소득 - 개인영업잉여) 비율

한편 이 시기의 영업잉여 호조와 피용자 보수 침체는 앞서 기업소득 호조와 가계소득 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업 부가가치 증가율과 영업잉여 증가율간의 비교이다. 주지하듯이 이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실제로 2006~09년간의 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7%의 낮은 증가에 그쳤다.<sup>6)</sup> 이는 2001~

06년간의 부가가치 증가율에 비해 2.6%p 낮은 것이다. 그런데 영업잉여 증가율은 동기간중에 오히려 1.5%p 상승하였다. 즉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증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윤증가율은 더 높아진 것이다. 2006~09년간의 영업잉여 증가율은 동기간중 기업 부가가치 증가율의 4배가 넘는다(표 2).

기업 영업잉여는 문자 그대로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서 피용자 보수를 차감한 잔여로

인 영업잉여 즉 자영소득을 모두 자본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실제 노동분배율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음. 자영소득에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섞여 있으며,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자영소득의 경우 자본소득보다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더 클 가능성도 높음.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에서 피용보수/요소소득 비율과 실제 노동분배율간의 괴리가 더욱 클 것이라 볼 수 있음. 위 지표는 이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자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기업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만을 토대로 노동분배율을 산출한 것임. 이는 자영소득내에서의 노동소득 비중이 자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노동분배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음. Gollin(2002)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도 이같이 구한 노동분배율과 단순히 피용보수/요소소득 방식에 의한 노동분배율의 추이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실제 노동분배율을 좀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됨(D. Gollin(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PE 110 (2)).

6) 가계와 기업의 부가가치 자료는 현재 2000~09년간의 자료만 공표되어 있음.

**표 2. 기업부문의 실질 생산 및 소득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00~09년	2000~06년	2006~09년
기업 부가가치 (A)	3.4	4.3	1.7
기업 영업잉여 (B)	5.9	5.4	6.9
기업부문 피용자 보수 (추정치)	2.1	3.7	-1.0
영업잉여 증가중 분배구조 변화의 기여율 $[(B-A)/B]$	42.4	20.4	75.4

구해진다.<sup>7)</sup> 따라서 부가가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영업잉여 증가, 혹은 부가가치 증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영업잉여 증가율 상승은 피용자 보수 부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기업 부가가치와 영업잉여 자료를 토대로 영업잉여 증가중 부가가치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과 (이윤/임금간) 분배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분해하여 볼 수 있다.<sup>8)</sup> 이같은 방식으로 구해보면 2006~09년간의 경우 영업잉여 증가의 75%가 임금/이윤간 분배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언론에도 종종 보도되었듯이 최근 수년간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내기업의 이익은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위의 통계적 사실들은 이 시기의 높은 기업 이윤 증가가 상당 부분 임금 부진을 토대로 한 것임을 보여준다.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는 각각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가장 주된 구성항목이란 점에서, 이같은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상반된 움직임은 이 시기의 가계 기업간 소득성장을 격차를

크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뒤에서 보이겠지만 2007년 이후의 가계 기업간 양극화에서 영업잉여/피용자보수간 분배 변화는 가장 큰 기여를 한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 2) 자영소득 침체

가계 기업간 소득 양극화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는 자영소득의 침체를 들 수 있다. 자영소득은 임금(피용자 보수)과 더불어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갖고 있어 자영소득의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한마디로 자영소득의 극심한 침체이다. 자영소득의 침체는 2000년 이후 전기간에 걸쳐 나타나나 특히 2007년 이후에 더욱 두드러진다. 자영소득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연

7) 기업 부가가치는 정확히 말하면 피용보수와 영업잉여, 기타생산세의 합임. 그러나 기타생산세는 다른 두 항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아 사실상 피용보수와 영업잉여의 합이라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음.

8) 분배구조 변화가 없다면(즉 이윤/임금 비율이 동일하다면) 영업잉여 증가율은 부가가치 증가율과 같을 것임. 따라서 영업잉여 증가율과 부가가치 증가율의 차이는 분배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음.

평균 4.5%의 증가(실질 기준)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자영소득 총액, 자영업자수 모두 절대 규모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2000~10년간에 실질자영소득은 연평균 -1.9%의 감소세를 보였다. 2007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어 자영소득 증가율은 -3.3%의 심각한 침체를 보이고 있다. 자영소득의 침체를 반영하여 자영업자수도 2002년에 정점에 달한 후 급감하는 추세이다. 이같은 자영소득 침체는 가계소득 부진을 통해 가계 기업간 성장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3) 이자율 하락 및 이자소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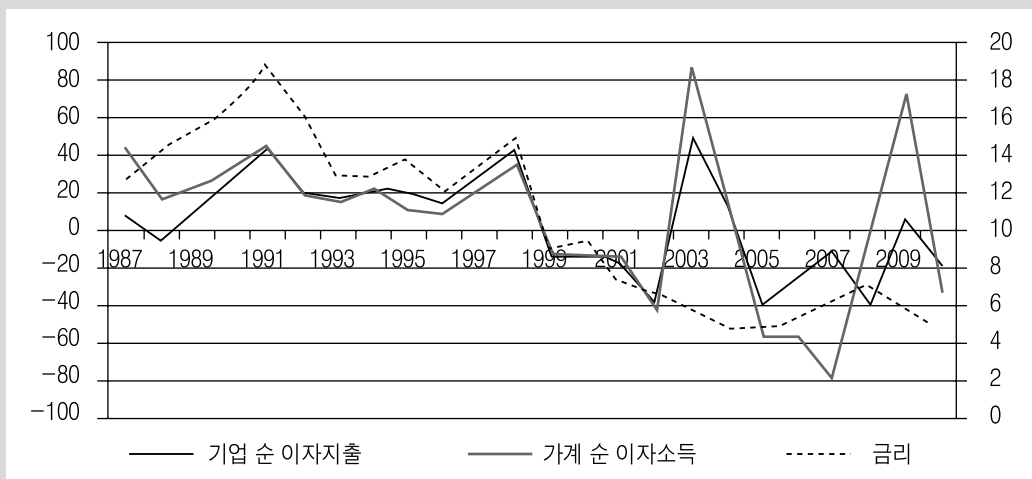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가계는 자금의 공급자이고 기업은 자금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가계는 이자수취가 이자지불보다 크고, 기업은 반대로 이자지불이 이자수취보다 크다. 즉 가계는 순이자소득이正的 값을 갖고 기업은 負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자율 변동이나 기업의 투자 변동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에 반대의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기업투자가 감소하면 가계의 순이자소득이 감소하여 가계소득에 감소효과를

표 3. 기간별 자영소득 증가율 추이(실질 기준)

(단위: %)

구분	1975~97년	2000~10년	2000~02년	2006~10년
자영소득 (개인 영업잉여)	4.5	-1.9	-2.1	-3.3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수	0.5	-1.3	1.2	-2.5

그림 6. 이자율과 가계 및 기업의 이자소득 증가율 추이



주: 1) 금리는 우축, 가계 및 기업 이자소득 증가율(경상, %)은 좌축  
 2) 금리는 회사채(장의 3년 AA- 등급) 연평균 이자율

표 4. 이자소득 변화의 가계, 기업 본원소득 증가 기여도

(단위: %, %p)

구분		1975~97년	2000~10년	2000~02년	2006~10년
가계	순이자소득	28.3	-26.3	-29.2	3.4
	가계 본원소득 성장기여도 (A)	0.9	-0.3	-1.1	0.0
기업	순이자지출	24.1	-17.1	-30.5	-20.4
	기업 본원소득 성장기여도 (B)	-13.2	3.5	14.0	1.2
본원소득 성장격차 기여도 (=B-A)		-14.1	3.8	15.1	1.2

주: 명목증가율 기준

미치고 기업에는 순이자지불이 감소하여 기업 소득에 증가효과를 미친다.

주지하듯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 금리와 투자 증가율 모두 대체로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말한대로 이같은 변화, 즉 이자율 및 투자 증가율 하락은 가계소득에는 감소효과, 기업소득에는 증가효과를 미친다. 이자소득 변화는 가계와 기업소득에 반대 방향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가계 기업간 소득 성장률 격차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다만 이자율 및 투자증가율 하락에 따른 이자소득 변화는 2000년대 초반에는 가계 기업간 소득 성장률 격차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007년 이후의 가계 기업간 양극화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소득 변화가 가계와 기업소득 성장에 기여한 성장 기여도(본원소득 기준)를 통해 추정해 보면, 2000~02년간에는 양부문 소득 성장률 격차를 약 15%p 확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반면, 2007년 이후에는 성장률 격차 기여도가 1%p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표 4).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 및 투자수요 하락 추이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이자소득(지불)이 가계나 기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 4) 조세 및 준조세 효과

가계와 기업의 본원소득(NNI)에서 2차분배 계층, 즉 조세 및 준조세(순사회부담금 및 이전지출<sup>9)</sup>)를 차감하면 각각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NDI)이 된다. 가계와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 및 준조세가 각각 가계, 기업의 본원소득 증가율과 같다면, 양부문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각각의 본원소득 증가율과 같을 것이다. 즉 가계와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 및 준조세가 각각의 본원소득에 대해 정확히 비례적이라면 조세 및 준조세는 가계, 기업간 소득 성장률 차이에 영

9) 2차분배는 조세와 사회부담금, 사회수혜금, 이전지출로 구성됨. 여기서는 편의상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준조세라 부르기로 함. 가계와 기업 모두 일반적으로 조세가 준조세보다 규모가 크나, 준조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음.

향을 미치지 않는다(즉 가계와 기업간 소득분배에 중립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계, 기업간 본원소득 성장률 차이와 가처분소득 성장률 차이는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처분 소득 성장률 차이가 본원소득 성장률 차이보다 크다면 조세 및 준조세가 소득 성장률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소득 성장률 격차를 축소시킨 것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조세 및 준조세가 기업, 가계소득 증가율간 격차를 소폭이나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증가율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처분 소득 성장률 격차에서 본원소득 성장률 격차를 차감한 것을 조세 및 준조세의 성장격차 확대 기여도로 간주한다면, 동 기여도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1.8%p, 2000년 이후에는 5.3%p로 나타난다(표 5). 즉 2000년 이후에는 조세 및 준조세가 가계와 기업간 가처분소득 성장률 격차를 연평

균 5.3%p 만큼 확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그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2007년 이후에도 동 기여도는 6.2%p로 비교적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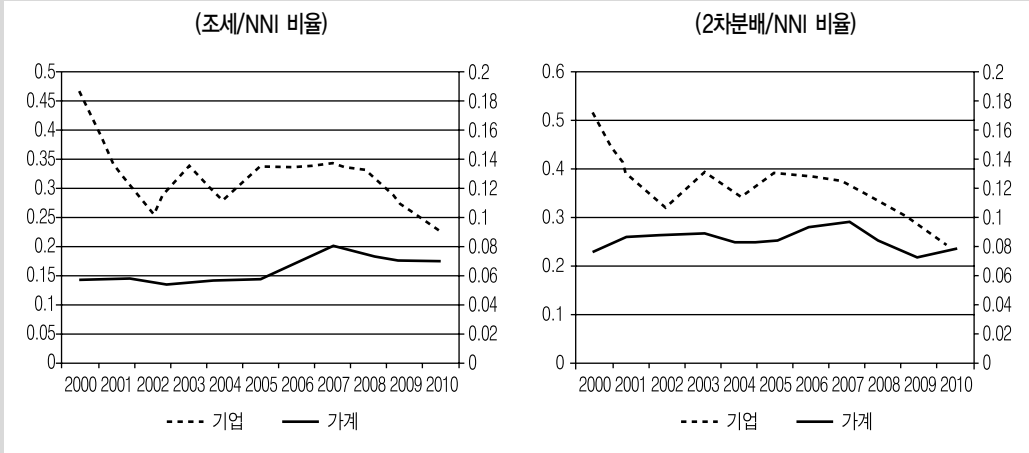
조세 및 준조세가 가계 기업간 소득 성장격차를 확대시킨 것은 본원소득에 대한 유효세율(조세/NNI 비율)이 2000년 이후 기업부문에서는 하락한 반면, 가계부문에서는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7]에서 보듯 조세/NNI 비율과 2차분배/NNI 비율이 기업부문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반면, 가계부문은 조세/NNI 비율은 소폭 상승하였고, 2차분배/NNI 비율은 거의 일정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동안 법정세율은 소득세나 법인세 모두 계속 인하되어 왔지만, 가계부문의 경우는 누진세제의 영향 등으로 본원소득 대비 유효세율이 높아진 반면, 기업은 법인세율의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점 등이 작용하여 유효세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한편 2007년 이후는

표 5. 2차분배계정(조세 및 준조세)의 가계·기업 가처분소득 성장격차 기여도

구분		1975~97년	2000~10년	2000~02년	2006~10년
본원소득(NNI) 증가율	가계 (A)	18.7	5.9	6.6	4.9
	기업 (B)	20.5	15.3	38.3	16.9
	C = B - A	1.8	9.4	31.7	12.0
2차분배 증가율(조세 및 준조세)	가계	25.6	6.2	14.6	0.4
	기업	24.4	6.7	9.2	3.3
가처분소득(NDI) 증가율	가계 (D)	18.4	5.8	5.9	5.3
	기업 (E)	18.5	20.5	63.0	23.5
	F = E - D	0.1	14.7	57.1	18.2
2차분배의 성장격차 기여도(%p) (G = F - C)		-1.8	5.3	25.4	6.2

주: 명목증가율 기준

그림 7. 가계와 기업의 조세/NNI 비율, 2차분배/NNI 비율 추이 비교



주: 기업은 좌축, 가계는 우축 기준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공히 조세/NNI 비율이 하락하였지만, 기업부문의 하락 폭이 더 커서 가처분소득의 성장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5) 종합

위에서 살펴본 주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기 위해 상기 요인별로 가계 기업간 성장양극화에 대한 기여율을 구해 보면 2000년대 초의 양극화와 2007년 이후 최근의 양극화는 그

원인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관찰된다.<sup>11)</sup> <표 6>에서 보듯이 우선 2000년대 초의 양극화에서는 2차분배 요인과 더불어 이자율 하락과 투자 부진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2007년 이후의 양극화에서는 임금 소득의 부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 이후의 양극화에서도 이자소득 요인은 가계 기업간 소득 성장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이자소득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관계로 양극화에 대한 기여율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임

10) 법정세율은 소득세(종합소득세)의 경우 현재 4단계 누진구조에 최고세율은 1996년 40%에서 2010년에 33%로 인하됨. 법인세의 경우는 2단계 누진구조에 최고세율은 1994년 32%에서 2009년에 22%로 인하되었고 2012년부터 20%로 추가인하될 예정임.

11) 기여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음. 먼저 본원소득 요인과 2차분배 요인의 기여율은 논리적으로 간명함. 가처분소득 성장격차와 본원소득 성장격차 간의 차이는 2차분배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본원소득 성장격차가 가처분소득 성장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본원소득 기여율, 나머지를 2차분배 기여율로 볼 수 있음. 본원소득내 요인별 기여율은 경제성장의 산업구조 요인 분해 분석에서 사용되는 비례성장 과리 분석 방법(Deviation from proportional growth)을 원용하여, 각소득항목이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본원소득의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 가상의 경우(따라서 성장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말값과 해당소득항목 실제 기말값간의 차이의 상대적 비율로 구하였음.

금소득 부진, 즉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간 증가 격차가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어서 자영소득 침체 요인도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차분배(조세 및 준조세) 요인은 2000년대 초와 2007년 이후 모두 중요한 양극화 기여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2000년대 초에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7년 이후의 양극화에서 동요인은 가계 기업간 가처분소득 성장격차의 약 1/3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에서 본 것처럼 최근의 양극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금/이윤간 분배변화이고 이는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 임금소득 부진으로 집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근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임금소득 부진이라 볼 수 있다. 임금소득 부진은 크게 고용 부진과 임금 상승률 부진의 두가지 측면에 기인한다(물론 양자는 서로 연관된 것이다). 고용은 주지하듯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 실업률과 실제 고용상황간의 괴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sup>12)</sup>, 미국 노동통계청(BLS)이 제안하는 한계근로자 등을 포함한 노동력 저 활용 지표(표 7의 U6)나 실질적 실업자로 간주될 수 있는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을 통해 보면 고용부진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표 7>에서 보듯 u6나 실질실업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임금 상승률 부진은 더욱 두드러진다.<표 8>에서 보듯 1인당 연평균 실질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5.6%였던 것이 2000년 이후에는 그 1/4 수준에도 못미치는 1.3%로 하락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0.2%로 실질임금의 절대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비교해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1인당 피용자 보수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상승

표 6. 가계 기업간 소득성장 격차에 대한 요인별 기여율

(단위: %)

구분	2000년대초 양극화 ('00~'02)	2007년 이후 양극화 ('06~'10)
임금/이윤(영업잉여)간 분배 요인	13.7(24.6)	41.3(66.1)
자영소득 요인	16.2(29.2)	19.4(31.1)
이자소득 요인	30.3(54.5)	7.3(11.7)
비이자 재산소득 요인	-4.7(-8.4)	-5.5(-8.9)
<본원소득 요인>	55.5(100.0)	62.4(100.0)
<2차분배 요인>	44.5	37.6
<가처분소득 성장격차>	100.0	100.0

주: 1) 기여율 산출 방법은 각주 11 참조  
2) ( ) 는 본원소득 성장격차에 대한 기여율

12) 노동력 저활용지표와 공식실업률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주요국이나 OECD 평균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남(변양규 (2009) 참조).

를 다소 상회하였던데 반해, 2000년 이후에는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큰 폭으로 못미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에는 노동생산성은 연간 2.4% 상승한데 반해 1인당 피용보수는 연평균 0.2% 감소하여 양자간의 격차가 2.6%p에 달한다. 이같은 임금 상승 부진은 전체 고용의 양적 부진과 더불어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고용의 질적 저하, 노동 조직률 하락에 따른 교섭력 약화 등의 결과로 추정된다.

#### 4. 가계 기업간 양극화와 최근 경제현안

글머리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한국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가계 기업간 성장 양극화는 가계 소득 증가 부진의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니다. 전체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소득 증가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추이를 지속한다면 그 이면에는 전체 경제성장률을 밀도는 가계소득 부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이고 소비는 주로 가계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가계소득 부진은 일차적으로 국민경제가 경제활동의 성과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뿐 아니라 서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가계소득 부진은 최근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과제들, 예컨대 가계부채 문제, 가계저축률 하락, 내수 부진, 체감경기 부진 등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

표 7. 고용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u6	5.8	5.1	4.0	4.4	4.7	4.9	4.5	4.2	4.2	4.9	5.1
실질 실업률	-	-	-	8.1	8.8	9.8	9.8	9.8	10.0	10.9	10.9
공식 실업률	4.4	4.0	3.3	3.6	3.7	3.7	3.5	3.2	3.2	3.6	3.7

주: u6는 실업자 + 구직단념자 +18시간 미만 취업자중 추가취업 희망자 기준, 실질실업률은 실업자 + 구직단념자 + 취업준비자 + 쉬었음 기준

표 8.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1인당 실질임금 상승률의 기간별 비교

(단위: %)

구분	1975~97년	2000~10년	2006~10년
비농림 노동생산성 증가율	4.1	2.5	2.4
1인당 피용자 보수 증가율	5.6	1.3	-0.2

주: 1) 실질 기준  
 2) 비농림 노동생산성 = 비농림GDP/비농림 취업자수,  
 1인당 피용자 보수 = 피용자보수 총액/임금노동자수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로부터 계산



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 가계소득 부진과 내수 부진, 체감경기 부진 등은 직관적으로도 그 관련성이 뚜렷하다. 가계소득 부진의 결과 가계소비 증가율은 2000년 이후 GDP 증가율이나 GNI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 물론 가계소득 부진의 이면에 해당하는 기업소득 호조가 투자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저하듯이 기업소득 호조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투자는 대체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표 9 참조).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가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비해 기업소득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sup>13)</sup> 따라서 최근의 가계 기업간 양극화는 기업소득 호조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에 비해 가계소득 부진을 통해 소비침체를 가져오는 효과가 더 크고, 그런 의미에서 내수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민간내수 증가율과 기업/가계소득 비율간의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도 본고에서 살펴보는 가계 기업간 양극화가 내수 부진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10 참조).

한편 체감경기 부진 내지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의 괴리 문제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큰 폭으로 하회한다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2000년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GDP 성장률과 연평균 2%p 가까운 큰 격차를 보인다(그림 8). 고도성장기와 비교한 성장률 하락 폭도 가계소득이 훨씬 커서, 2000년 이후 GDP 성장률은 고도성장기의 1/2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의 1/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그림 9). 2000년대 들어 저성장 논란이 크게 확산된 것도 가계소득에 기반한 체감 성장률 하락이 주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문제나 가계저축률 하락 문제와의 관련을 살펴보자. 우선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의 측면에서 보면 가계소득 부진이 분모를 줄임으로써 가계부채 부담을 늘린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분자의 측면, 즉 가계소득 부진이 저축 부진이나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에도 기여하

표 9. 기업소득과 투자 추이 비교

(단위: %)

구분	1975~97년	2000~06년	2006~09년
기업 가처분소득(NDI) 증가율	18.5	18.6	20.8
기업 투자(I) 증가율	20.8	7.1	5.1
I/NDI 비율 평균	4.2	3.0	2.2

주: 1) 투자는 제도부문별 자본계정의 법인 총고정자본형성(자본계정은 2009년이 최근 자료)  
2) 경상기준

13) 가계소득은 가계소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기업소득은 주가 및 Tobin의 Q의 변화, 그리고 내부자금에 의한 금융제약 완화를 통해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표 10. 민간내수 증가율과 기업/가계소득 비율간의 관계 분석(1975~2010년)

구분	종속변수: 민간내수 증가율	
	OLS 1	OLS 2
상수	12.19 (5.81)***	12.69 (5.98)***
기업소득/가계소득	-53.47 (-2.55)**	
기업소득/가계소득(-1)		-61.38 (-2.72)**
외환위기 더미	-31.77 (-5.95)***	-28.51 (-5.81)***
$\bar{R}^2$	48.9	50.7
D.W.	1.56	1.59

주: 1) 민간내수 = 민간소비+총자본형성  
 2) ( )안은 시차와 t 값  
 3)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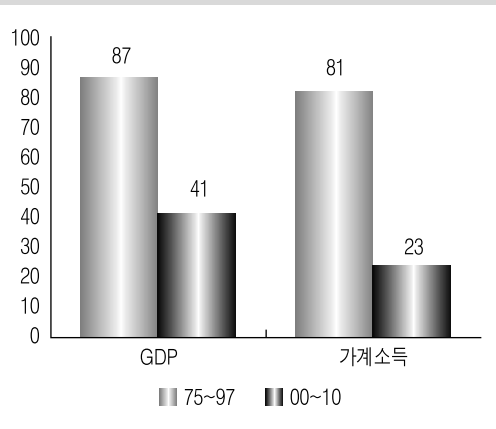
그림 8. GDP 성장률과 가계소득증가율

(단위: %)



그림 9. 고도성장기 대비 성장률 하락 비교

(단위: %)



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소득, 소비간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에서 가계소비는 가계소득보다 빨리 증가하여 소비성향은 상승하였다. 소비성향의 상승은 저축을 하락은 물론 가계부채 증가에도 기여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소비성향 상승의 원인이 소득측면(소득부진)에 있는가 혹은 소비

측면(소비의 빠른 증가)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양자 모두일 수도 있다). 후자는 흔히 말하는 과소비와 연관된 것이다. 예컨대 금융위기전 미국의 경우 종종 가계의 과소비가 높은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으로 이야기된다. 과소비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대중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례를 볼 때 대체로 소비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면 무난할 것 같다. 금융위기전 미국의 경우 대체로 이러한 의미에서 과소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0~07년간 미국의 실질 가계소비 증가율은 연간 2.8%로 가계소득 증가율이나 GDP, GNI 성장률을 모두 상회하였다. 특히 소비증가율과 GDP, GNI 성장률간의 격차는 연평균 0.4~0.5%로 큰 편이어서 이 시기의 미국 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우도 과소비가 가계부채 문제나 저축률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가처분소득 비율은 최근 크게 높아져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 최고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가계저축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최근에 미국의 동비율을 하회하고 있다. 이 기간중에 가계소비성향은 상승하였고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여기까지는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과 같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로서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과 달리 2000년대의 한국에서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이나 GNI 증가율에 상당 정도 못미쳤다. 더욱이 이 시기에 이자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금융기관이 가계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크게 완화되는등 소비증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소비증가율은 GDP나 GNI 증가율을 하회하였다. 물론 그 이유는 앞서 본대로 가계소득이 매우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2000년 이후의 한국경제에서 가계소비는 부진하였다. 다만 소비가 부진하였지만 가계소득은 그보다 더 부진하였기 때문에 가계저축율은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다.<sup>14)</sup> 즉 2000년 이후 한국경제에서 가계저축률 하락이나 가계부채 문제 심화의 원인을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찾는다면 소비증가보다는 가계소득 부진을 지목하는 편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가계부채 관련 지표의 한미 비교

(단위: %)

구분	부채/소득비율	가계부채	가계소득	가계소비	GNI	GDP
한국(2000~10년간)	1.8배 상승	12.3	5.8	6.3 (3.3)	6.9 (3.4)	6.9 (4.1)
미국(2000~07년간)	1.4배 상승	10.3	5.2	5.3 (2.8)	4.9 (2.3)	5.1 (2.4)

주: 부채비율을 제외한 지표는 경상기준 연평균 증가율, ( )은 실질 증가율

14) 물론 가계부채는 소득/소비 관계 이외에도 집값과 같은 자산가격 추이, 가계의 자산 구입 행태, 인구학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 다만 여기서는 논의의 성격상 소득/소비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함. 가계부채 결정요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현정 외(2010)' 참조.

## 5. 정책적 시사점

최근의 가계 기업간 양극화 현상은 양부문간의 성장 격차가 매우 크고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확대되는 추이에 있다는 점, 가계소득 부진을 통해 우리경제에 여러가지 문제를 낳는 직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현안과제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근의 가계 기업간 양극화는 무엇보다 임금소득의 부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일차적으로 고용과 임금 부진 타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고용문제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최근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계근로자나 사실상의 실업에 해당하는 일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질실업률 등의 추이를 보면 금년 2분기까지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일자리 창출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높다.<sup>15)</sup> 특히 임금의 경우는 고용보다 개선이 부진하고 특히 최근에는 물가상승이 확대되면서 실질임금 회복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금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는 등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임금상승이 생산성 상승률을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하는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상승률 수준의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도, 독려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의 가계 기업간 양극화에는 조세 등 2차분배요인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대응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세 및 준조세와 관련된 정책 추진시 향후 당분간은 가계소득 부진 해소나 가계기업간 격차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활성화 역시 양부문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기업의 투자활동이 이자소득을 통해서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과거에 비해 중요성이 크게 낮아졌지만, 실물투자 활성화는 고용창출과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실물투자 촉진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분야로는 에너지 효율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 유망할 것으로 본다. 이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면서도 외부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고 또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좀 더 범위를 넓혀 전체적 정책기조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정부 들어 그동안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온

15)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정책으로서, 정책적 수단을 통해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고용결정에 내부화함으로써 기업행태를 고용촉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2010) '고실업, 강한 재정제약하에서의 일자리 창출방안' 에서 관련 정책방안을 다루고 있음.

만큼, 그리고 이제 기업소득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소득부진 해소가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는 가계소득창출 지원에 역점을 두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고용 및 임금측면의 정책과 아울러 저소득계층이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창출지원, 각종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역할을 지적하고자 한다. 글머리에서 언급한 가계와 기업간 소득 흐름을 고려할 때 가계 기업간 양극화 내지 가계 소득 부진은 결국 내수 부진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수출

호조가 내수 부진을 상쇄하고 남는다면 기업 수익 호조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추이나 이미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경제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수출 호조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가계소득 부진이나 임금 부진 속에서의 기업소득 호조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더러 전체경제의 장기성장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도 가계와 기업, 이윤과 임금간의 고른 증가를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문헌